

#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 Online Series

2021. 06. 22. | CO 21-18

박 영 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 진 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 은 미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최 지 영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이 올해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이하 ‘이번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6대 의제는 상반기 평가·하반기 정책 방향, 식량, 방역, 국제정세분석과 대응방향, 육아정책, 조직 문제였다. 공개된 일부 결과를 총평하면 두 가지이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 생산목표 달성을 촉구하며 노동력 최대 동원 방향에서의 ‘규율과 정풍(整風)’ 지속이다. 대외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나 협상 여지는 남겨두는 ‘관망 속 양면 대응 대비’ 기조이다. 이는 8차 당대회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정책 방향이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전원회의와 다르게 결정서 등 주요 회의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대마대남 비판도 없었다. 고민이 깊어진 북한지도부의 현실이 엿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전원회의의 공개 결과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밝힌다.

### 김정은 영도 강조하며 정풍운동 지속

이번 전원회의 전 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연출의 핵심 키워드는 ‘김정은의 애민정신’ 및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고양’이다. 김정은과 노동당을 중심으로 고난한 환경 하에서도 하반기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전당적 의지 및 관련 사업 이행이 강조되었다. 김정은 총비서는 “현 시기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결정적인

시행조치를 취하려는 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핵심사항이라고 언명”하면서 “인민생활안정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충심으로 친히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하였다며,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복무정신이 담겨진 총비서동지의 중대결심과 결단”을 이행하라는 결의를 내놓았다.<sup>1)</sup>

다음으로 정풍 지속이다. 김정은은 상반기 당 조직사상 생활을 총화하며 당간부들이 첫째,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기대에 따라서지 못한 자책감을 안고 자신들의 당생활정형을 전면적으로 심각히 돌이켜” 볼 것을 제기하고, 둘째, “벌써 지도기관 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로되고있는데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면서, 셋째, “상반기기간 나타난 결함들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당대회가 높이 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기며 더욱 각성분발하여 맡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에 있는 힘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고, 넷째, “혁명의 전세대들처럼 어떤 간고한 환경에서도 당중앙의 결정을 철저히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하며 당의 본태를 고수하기 위하여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는 진짜배기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며 자기반성과 사업작풍의 혁신을 요구하였다.<sup>2)</sup>

### 사상·규율 분야 정치국 인선 및 노동력 최대 동원

이번 전원회의에서 조직·인사 관련 주요 특징은 사상교육과 규율통제 분야 정치국 인선이 다. 대회 마지막 날인 6월 1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를 해임 및 임명”하였다고 했으나 전체 조직인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기관 간부는 향후 있을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된 정치국 위원 태형철은 2019년 초 기준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으로 해임(당시 후임 최상건)되었던 인물이다. 그의 복귀는 청년세대, 특히 신세대 엘리트 사상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된 이상철은 중앙검찰소 소장으로 핵심사업인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척결’ 사업 체계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 전원회의에서 중시된 향후 정책 기조는 노동력 최대 동원을 통한 식량문제

1) 3일차 회의(6.17.) 중 『조선중앙통신』, 2021.6.18.일자 보도

2) 4일차 회의(6.18.) 중 『조선중앙통신』, 2021.6.19.일자 보도

대비 및 계획목표 달성이다. 첫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관련 결정서 2종을 채택하였는데 하나는 “올해 시달된 주요국가정책적과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전당, 전군, 전민이 올해 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결정서”이다.<sup>3)</sup> 둘째, 당 전원회의의 안건 중 이례적으로 ‘육아정책을 개선강화’하는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는 여성과 주부 노동력을 하반기 성과도출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국적 방역사업 및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 사업을 지속하며 ‘규율 강화 속 주민 총동원’ 방향 하에 하반기 내치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도이다. 여기에는 북한 젊은 세대의 사상과 행태를 우려하며 20~30년 후 세대 통치까지를 고려하는 김정은의 고민도 보인다.

### 계획 실패 최소화 위한 총력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경제 부문의 주요 의제로서 각 생산 부문의 계획 목표 달성에 대한 점검, 농업 부문의 생산량 제고 및 주민생활 안정이 논의되었다.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제시한 이후, 북한당국은 인민경제 각 부문의 계획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이 크게 실패한 여파라고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 2월 개최되었던 전원회의에서는 농업과 건설 부문의 목표가 한 차례 재조정되기도 했다. 농업 부문의 목표는 과도하게 설정된 반면, 건설 부문의 목표는 낮추어 잡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장기 경제발전계획이 실패한 경우 완충기를 두어 인민경제계획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곧바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그 도입단계가 일정 부분 완충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보도에 따르면, 상반기 공업 부문의 생산은 계획 대비 144%, 전년 동기 대비 125%로 달성되었다고 한다. 개별 산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전반적으로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계획 목표를 설정한 점, 코로나 19 관련 리스크도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공장 가동률은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북제재로 2017년 이후 자본재 수입이 중단되고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수입중간재의 공급도

3) 3일차 회의(6.17.) 중 『조선중앙통신』, 2021.6.18.일자 보도

원활하지 않아, 공업 부문의 성과가 긍정적일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대북제재와 보건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산업 간 연관관계는 악화되고 이는 인민경제 전반의 계획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각 생산 부문의 목표 달성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하는 것은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 식량 수급여건 악화 속 주민생활 안정 강조

눈에 띄는 대목은 식량 사정에 대한 언급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자연재해로 식량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올해 유통되는 곡물의 상당 부분은 지난해 가을에 수확된 작물이다. 한국 농촌진흥청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곡물생산량은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다. 지난해에는 국경 봉쇄로 비료 등 영농물자 수입이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수해와 태풍피해까지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식량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신호는 올해 1/4분기 시장의 옥수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던 쌀 가격도 춘궁기(2/4~3/4분기)에 접어들면서 최근 급등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시장 환율이 급락한 이후 지금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시장 물기는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달러 표시 쌀 가격은 0.5~0.6달러/kg에서 최근 0.9~1.4달러/kg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다.<sup>4)</sup> 쌀 가격을 비롯한 시장 가격의 급등세는 대북제재 강화 직후와 코로나19 충격 직후에도 관찰된 바 있으나, 당시의 가격 상승이 심리적 요인에 따른 비축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면 올해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도가격 부과나 공공배급제도를 통한 북한당국의 개입이 한계에 다다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올해 3~4월 중 해상무역을 부분적으로 재개하여 비료를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등 농업 생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을수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3/4분기까지 상업적 수입이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식량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이동 통제는 식량 유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지역 및 계층에 따라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4) 『데일리NK』, 2020.6.8. 기준과 『아시아프레스』, 2020.6.15. 기준의 북한시장 가격동향 참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식량 여건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민생활 안정이 특히 강조되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시행조치가 담긴 특별명령서를 발령하기도 했다. 특별명령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식량을 비롯한 소비재 공급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경제는 계획과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소비재 공급은 상당 부분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던 쌀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된다면, 이는 전반적인 시장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경봉쇄가 강화된 지난해 식량을 제외한 식료품, 수입 소비재 등의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급등하기 시작한 바 있다.<sup>5)</sup>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국영상업망을 통한 소비재 공급 확대, 상업적 무역 재개, 안정적인 시장 경제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최근 시장을 물리적으로 통제하여 전반적인 시장 불안에 대처하려고 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시장 확산 현상을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체계와 질서”라고 규정하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sup>6)</sup>은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시장 억제 정책이 시도되었던 2000년대 후반의 상황과 유사하다. 코로나19에 따른 비상방역 강화도 시장을 통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식료품을 비롯한 전반적인 소비재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 거래를 억제하는 경우, 이는 거래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오히려 물가 급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북한당국의 정책 대응은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 포섭과 통제의 양면 전략 속 민생 관리

사회 부문의 주요 의제로 북한은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부문에서의 분발과 함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계속 투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내핍과 노력동원의 강도가 세지면서 불만 고조와 체제 이완 및 이탈을 막기 위해 양방향의 정책을 제시했다. 한편으로 사회복지(교육과 보건) 혜택을 늘리고 문학예술을 통한 선전선동사업을 강화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법적 통제 강화 등 포섭과 통제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비상방역 장기화 대비 및 주민 기본생활 보장의 시급성이다. 내치를

5) 최지영, “시장의 물가·환율 변동을 통해 본 북한경제,” 『KDI 북한경제리뷰』, 1월호 (2021).

6) “경제 일변도가 아닌 조선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조선신보』, 2021.6.17.

중시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본생활, 즉 의식주 생활이 어려워진 데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김정은은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는 곧 “경제전반을 유지하고 인민들의 식의주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며 국가적 방역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사업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경공업과 수산업의 생산 증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 사회 분야 결과를 보면, 인도주의 차원의 고민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육아정책과 여성 노동력 동원

이번 전원회의에서 육아정책 문제가 중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이 의제는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다뤄졌는데 김정은은 국가예산의 부담이 크더라도 어린이의 양육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최중대 정책이고 최고의 숙원”이라며 육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서 탁아소와 유치원 시기가 제일 중요하며 국가적 부담으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우유와 영양식품을 공급하라며 세부 방침을 지시했다. 이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들을 잘 먹이는 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육아정책을 개선,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는 기존의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부담의 육아정책을 정상화하는 조치이다.<sup>7)</sup>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의 시혜적 육아정책은 거의 형해화되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수준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크게 줄었고, 여성들도 결혼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져 보육시설 대신 가정보육을 주로 선택했다. 더욱이 국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경우 의식주 관련 필요 경비를 대부분 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국가 부담이 큰 육아정책의 정상화 조치가 제기되었는가? 그 원인은 앞서 제기한 노동력 최대 동원 정책에 있다.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방송(6.17.)은 황해남도에서 13,700여 여맹원들이 농업 부문으로 탄원했다고 보도했다. 황해남도는 북한의 최대 식량 생산지이다. 탄원의 형식을 빌려 농촌지

7) 북한의 육아정책은 ‘어린이보육교양법’에 총망라되어 있다. 이 법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제2조)는 원칙과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제12조)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법률은 어린이 식량 공급(제15조)과 탁아소와 유치원에 젓(우유), 고기, 알(계란), 과일, 납세, 사탕 등 가공 식료품의 정상적 보장(제16조)을 명문화하고 있다.

역에 대규모의 기혼 여성들을 이주시켜 부족한 농업 노동력을 보충해서라도 식량 생산을 높이려는 자구책이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가정주부들을 일터로 보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수용해야 하고, 따라서 보육시설에 정상적인 물질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기혼 여성들의 노력 동원을 통해 해소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혼 여성들의 생산 현장으로의 복귀는 시장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육아정책의 개선 강화 조치는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은 물론 시장 억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사항이다.

### 북·미 간 협상 탐색

대의 부문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대미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방향을 명시”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정은이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평화적 환경과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이 공개되었다. 그 배경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협상의 탐색’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를 미국의 안보 위협요소로 규정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대북정책 검토(Review) 완료 후 “단호한 억지(stern deterrence)와 외교”를 원칙으로 “(정교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으로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언급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지난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기존 남북 및 미·북 간 약속(commitments)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이끌려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 특히 김정은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주목되었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결과 대화의 모든 국면을 준비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강조했다. 비교적 절제된 표현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억제와 외교’ 원칙에 대해 평행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김정은의 8차 당대회 발언,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3월 18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그리고 바이든 의회연설 중 대북정책 언급에 대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구태의연하게 추구”하겠다는 “낡고 뒤떨어진 정책”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5월 2일 외무성 미주국장 명의 담화 등과 비교해 볼 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제시하며 대화 가능성을 봉쇄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 정세안정 기조 하 양면 전략과 친중 행보

이번 전원회의 대외 부문 논조를 볼 때, 북한은 이니셔티브를 행사하며 북미관계의 향방을 결정하려 하기보다는, 상황과 추이를 살펴보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겠다는 북한판 “기다리며 지켜보기(wait and see)” 전술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정은의 발언을 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대미외교노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새로 출범한 미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동향”을 반영한 전략전술적 대응의 일환으로 소위 ‘강대강 선대선’ 노선의 변용 수준이다. 그 근거로 김정은은 이번 전원회의 개최 전 열린 6월 11일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2차 확대회의에서 “당의 군 건설 노선과 방침들을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3일차 전원회의에서도 “국가의 전략적 지위와 능동적 역할을 더욱 높이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핵능력 확대 및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라는 협상력 고도화 전략 지속 및 화전양면 전략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를 낮추었지만 ‘은근한 압박’을 전개하고 있다. 협상에 나설만한 적절한 동기를 제공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김정은이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힌 점이다. 이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과거로부터 애용해오던 표현이다. 김정은의 발언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3일차 회의 바로 다음 날인 18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긴장에 직면했다”며 북한의 ‘은근한 압박’에 힘을 보태면서도, “관련 국가는 기회를 잡아 한반도 정세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정세 완화와 북미관계 발전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중 간 조율 또는 교감이 감지되는 부분이다. 북한의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장이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보여주며 대미영향력 증대를



원하는 중국의 계산이 투영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응 방향

이번 전원회의 결과 북한지도부가 계획경제와 노동력 총동원 및 사상과 규율 강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나,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내부로부터 새로운 것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지도부 역시 이를 예상 및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에게는 국제 협상이 중요하며 북한 협상력의 핵심은 첨단전략무기와 집단적 조직력 수준이다. 미국주도 국제협상 무대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북한’은 협상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내치와 외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고민이 깊어진 북한과 마주하기 위한 다차원적 고려가 중시될 때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북 메시지 및 외교가 중요하다. 외형적 중요 이슈는 8월 한미군사훈련 잠정 중단/연기/축소 여부일 것이다.

둘째, 6월 내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한 특사급 접촉을 통한 북한 견인과 함께 한미군사훈련 관련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하다. 올해 6~7월을 잘 관리하면 8월 한미군사훈련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9월 남북관계에 기회의 창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규모와 타이밍’, 특히 북측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백신+α)을 이전보다 대규모로 제안하며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때 α는 식량대체식량 등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물품이다.

넷째, 메시지 관리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공식-비공식적으로 북한의 발전과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야 한다.

다섯째, 도발 억지 차원에서 도발의 명분이 되는 반북단체 활동을 자제시키기 위해 ‘이들(반북 단체와 활동가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마음을 달래는 사업’을 중시해야 한다.

여섯째,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국회 협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대국민 공론화 등 ‘다양한 측면 지원 활동’ 강화이다.

일곱째, 올해 7월은 중국공산당 100주년, 북중조약 및 북러조약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 계기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견인이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측과 접촉 기회가 있는 네트워크와 사업이 중시되어야 한다. 관련하여 비공식 사업에 대한 다양한 고려도 필요하다. 북한에 주요 커넥션이 있는 중국측 인사들을 통해 중국과 연계한 남북중 협력 방안도 다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